

## 여성취업인센티브 제고를 위한 보육비 지원 소득구간 세분화 및 지원기준 상향 조정

수행과제명 :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효과 분석과 과제

과제책임자 : 김태홍 선임연구원

Tel: 02-3156-7130, e-mail: kimth@kwidmail.re.kr

### 요 약

자녀육아 책임이 아직까지도 여성에게 무게가 주어지는 현실에서 보육료 지원제도는 여성의 취업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 현재의 보육비 지원은 소득구간이 3단계로 나누어져 있어 구간 간 지원금액의 차이가 큼. 따라서 보육선진국들과서와 같이 소득구간을 다양하게 세분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효과를 증진시켜야 할 것임. 또한 지원금의 확대는 지원을 확대 보다는 대상 가구의 소득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여성고용 안정 및 촉진 제도와 같은 고용정책 이외에 여성인력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인 조세 및 사회보장정책, 모성보호와 같은 일·가정 양립정책 등이 여성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음. 특히 여성인력 활용과 관련된 조세 및 급부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OECD 모형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 보육제도 및 모성보호제도를 담은 한국형조세·급부모형(KWDI-OECD Taxben Model)을 새롭게 구축하였음. 그리고 이러한 한국형조세·급부모형을 이용하여 조세, 사회보장부담금, 조세격차와 함께 보육비 지원과 육아휴직을 포함시켜서, 특히 이차소득자의 취업인센티브를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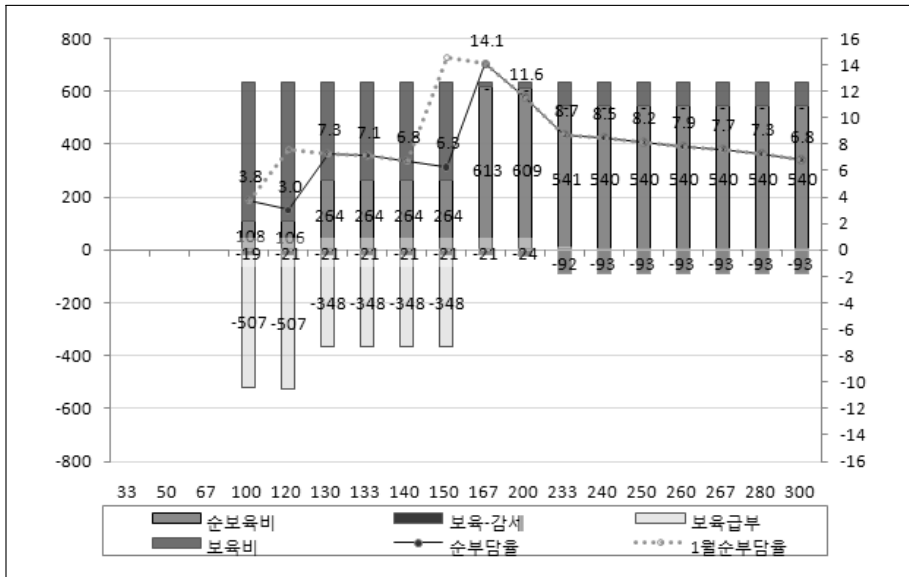
## 2. 정책의 추진방향

□ 보육은 취업 뿐만 아니라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본 연구의 정책수요자 대상 조사결과에서도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정부 보육비 지원대상 가구소득 수준의 상향 조정, 결정세액에서 보육비 공제한도 인상 등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았음

□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중산층 이하 계층을 중심으로 보육비를 지원함. 지원율은 가구원 수에 따라 설정된 3단계(100%, 60%, 30%) 인정소득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층 구간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 수혜 차이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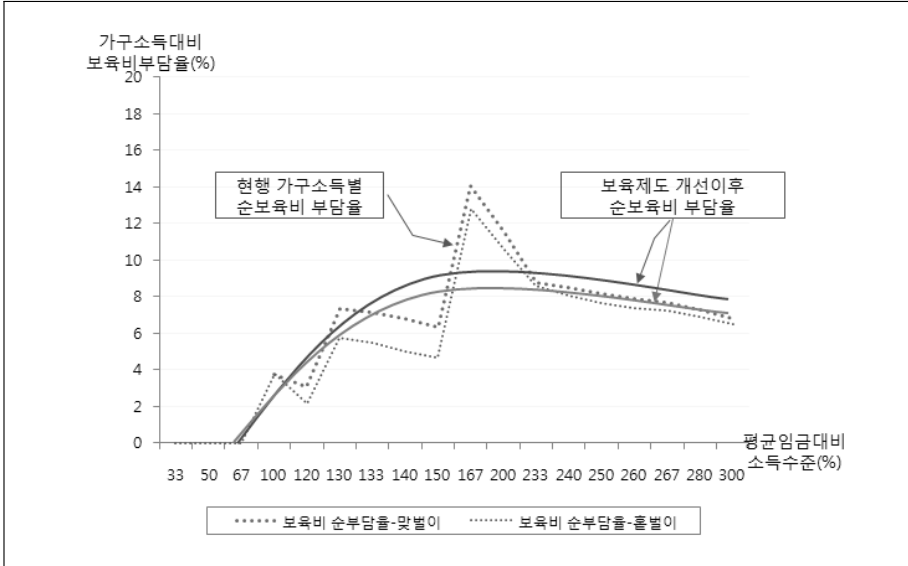
※ 일본: 중앙정부는 영아, 유아에 따라 각각 7단계로 구분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며 지자체에 따라 더욱 세분화하여 지원

※ 호주: 가구소득에 비례한 지원방식을 사용하며 소득수준이 35,478달러 미만은 100% 지원, 그 이상 소득수준이면 1,000달러 단위로 소득에 비례한 지원 비율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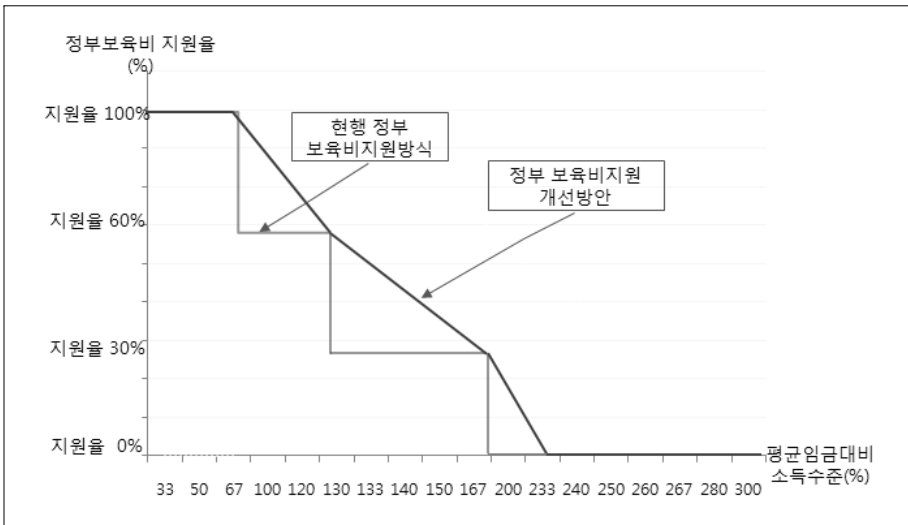


<그림 1> 두 자녀 맞벌이가구의 순보육비 부담율

- 본 연구에서 보육비를 포함한 조세·급부제도가 가구의 취업인센티브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특정 가구소득에 도달하면 보육비 부담이 급증하여 가구의 취업인센티브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 즉,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보육료 지원방식은 가구원 수에 따라 설정된 3단계 인정소득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구소득이 평균임금의 133%, 167%를 기점으로 그 이상이 되면 정부보육비 지원이 급감함. 이에 따라 해당 근로소득을 가져오는 근로시간대나 일자리에 대한 주소득자 혹은 이차소득자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킴. 특히 여성이 대부분인 가구의 이차소득자의 특정 수준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하려는 욕구를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음
- 따라서 특정 소득구간의 취업인센티브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림 3>과 같이 개편하는 것이 필요함. 즉,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정부보육비 지원비율을 점진적으로 감소시켜야 함
- 정부 보육지원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가구소득이 평균임금의 150~180% 수준인 가구의 순가구소득에 대한 보육비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음. 가구의 이차소득자 대부분이 여성이므로, 이러한 가구의 순보육비 부담률을 낮추어서 이들의 평균임금 50~80% 수준의 일자리에 대한 취업인센티브를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함. 이와 같이 가구 이차소득자인 여성의 취업인센티브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보육비의 30%를 지원하고 있는 가구소득 기준만이라도 좀 더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2> 현행 정부 보육지원제도의 고용효과



<그림 3> 정부 보육지원제도의 개선방안

- 또한 향후 보육비 지원제도를 확대에서는 현행 보육비 지원기준에서 가구 소득별 지원율을 높이기보다는, 지원율은 그대로 두고 지원 기준이 되는 가구소득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왜냐하면 정부가 보육비의

60%, 30%를 지원하는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을 제외한 가구의 순보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조세제도에 의해서 세액공제 형태로 일정 부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임

### 3. 정책효과

- ☐ 보육료 지원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보육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보육정책의 성과 제고
- ☐ 보육료 지원제도 개선을 통하여 맞벌이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 접근성 증진
- ☐ 안정적 보육정책 운영으로 여성의 취업 인센티브 제고